

창간 44주년 특집

# 다른 나라들은 뉴시터를 어떻게 깨끗이 보존하고 있나? 세계의 뉴시터 환경보호 정책

오늘날 대한민국 뉴시터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어자원 감소와 뉴시터 쓰레기 문제다.  
특히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뉴시터 쓰레기 등 환경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일환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  
세계 각국의 뉴시터 환경보호 정책과 문화는 과연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일본 내수면

# 낚시클럽의 자발적 낚시터 보호

‘쓰레기 제거작전 낚시대회’에 조구업체들 협찬

다나카 타케시 田中 武 서일본떡붕어낚시연합회 최고 고문·마루큐 어드바이저



일본의 저수지 수는 21만여 개로써 그중 농경지가 많은 관서지방에 70%가 몰려 있다. 이 저수지들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관개용수,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가 주 사용목적이며 일부 저수지가 드물게 식수용으로 쓰인다. 그중엔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붙인 사유지도 있으나 대부분 마을이나 시와 현에서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는 떡붕어는 대부분 자연번식한 개체들이다. 다만 일부 개인 사유지에선 영업 목적으로 고기를 방류하고 있으며 그런 곳에선 허락 없이 낚싯대를 펼 수 없다. 공유지든 사유지든 낚시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낚시금지라는 표시를 해두고 있다.

## 시청 공원과에서 무료 낚시잔교 설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일본 지역은 동일본 지역보다 온난해서

떡붕어의 자연번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잘 낚이는 저수지는 당연히 낚시인들이 몰린다. 그것을 본 마을이나 개인이 저수지를 임대해 유료낚시터로 운용하기도 하며 낚시인의 편의를 위해 낚시용 잔교를 설치하기도 한다.

일부 큰 저수지는 상류에 공원을 조성하기도 한다. 저수지 공원은 낚시인에게 곧 쉼터를 의미한다. 그 산책 코스에 낚시인이 앉아 낚싯대를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본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수지를 공원화할 경우 낚시를 금지시킨다고 들었는데 오랜 기간 낚시터로 친숙해있던 곳이 낚시금지로 묶인다는 현실은 매우 슬픈 일이다.

효고현 니시와키시청 공원과의 경우 저수지를 정비해 연안에 낚시용 잔교를 설치하여 낚시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무료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어 그 자체로 훌륭한 낚시터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낚시터 공원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낚시클럽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교육 실시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낚시터의 쓰레기는 머리가 아픈 문제로서 낚시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떡붕어 낚시인은 대부분 어딘가의 낚시클럽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낚시환경의식이 투철하다. 회원들은 클럽에서 ‘쓰레기는 갖고 가라’라는 교육을 늘 받고 있다.

낚시터 쓰레기는 배스낚시인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스낚시인은 클럽에 소속되어 있



일본낚시진흥회의 낚시터 환경보호 행사.



는 사람들이 적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부 배스낚시인의 쓰레기 방치로 인해 마을 주민이나 소유자의 노여움을 사서 낚시가 금지되기도 한다.

저수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캔이나 1회용품의 비중이 높다. 저수지 주변엔 자동판매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손쉽게 커피나 주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져온 음료수의 빈 깡통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도시락 용기 등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버려진 낚시줄이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새들이 낚시줄에 다리가 얽혀서 큰 상처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낚시줄은 낚시 중 수중 장애물에 걸려서 끊긴 것들이 많은데 이렇듯 버려진 낚시줄은 물가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으므로 낚시인 스스로가 회수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낚시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은 '쓰레기 제거작전'이라고 부르는 낚시대회다. 낚시대회가 열리는 날 아침에 쓰레기봉투를 전 참가자에게 배포하고 자신이 앉은 주변의 쓰레기를 주위에게 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대회 협찬 메이커에선 쓰레기봉투를 가져오는 낚시인에게 상품을 제공한다. 그 상품이 타월 한 장이라고 해도 낚시인들은 기뻐한다. 크고 작은 낚시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낚시인들이 함부로 투기

떡붕어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량된 어종이긴 하지만 낚은 고기를 가져가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자원 감소는 일은 없다. 또 성장이 빠른 어종이자 양식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방류할 고기를 구하는 일도 어렵지 않다. 다만 민물 수계에 퍼져 있는 외래어종이 어자원 감소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떡붕어가 수중의 말풀이나 초목에 낚은 알은 블루길의 먹이가 되기 쉽고 새끼 물고기는 배스의 먹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 낚시터에는 작은 붕어는 만나기 힘들어졌다. 또 붕어가 거대해지면서 '꿈의 50cm'라 부르던 5짜 대물의 가치도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일본 낚시인들은 낚은 고기를 방류하는 캐치앤릴리즈 의식이 대단히 높다. 장시간 낚시를 할 때엔 낚은 고기를 살림망에 낚는 행위가 고기를 다치게 한다고 생각해서 낚은 즉시 방류하는 것을 낚시인의 기본 매너라고 생각한다. 캐치앤릴리즈를 할 때는 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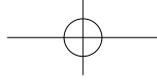
낚시터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있는 낚시대회 참가자들.



낚시대회 참가자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뜰채로 떠낸 후 주둥이에서 바늘을 떼어내서 보내주고 있다. 최근엔 다른 방법이 보급되고 있다. 60~90cm 길이의 바늘뺄기를 활용해서 아예 뜰채를 사용하지 않고 라인을 파악해서 수면에 얼굴을 내민 붕어의 입에서 바늘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장의 바늘도 상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붕어가 아프지 않게 돌려보낼 수 있으므로 가장 완벽한 릴리즈 방법이다.

정부가 떡붕어낚시와 관련해서 관여하는 일은 없으며 낚시를 즐기는 데 있어 정부에 지출하는 별도의 비용도 없다. 낚시를 국민이 즐기는 오락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떡붕어의 보호나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곳은 낚시단체다. 일본낚시진흥회나 기타의 공익법인. 또는 서일본떡붕어낚시연합회와 같은 지방의 클럽 등이 자금을 조성해 붕어를 방류하고 있다. 이 착실한 방류사업 덕분에 일본의 떡붕어낚시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일본 바다

# 어협과 조구업체가 환경보호에 앞장

## 지역별 어업협동조합이 바다 수질 보호 노력

조홍식 理學博士, 루어낚시 첫걸음, 루어낚시100문100답 저자

바다낚시터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의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더 환경문제에 열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낚시인 개개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낚시인들이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나 낚시관련 단체가 문제성을 인식하고 일찍 행동에 나선 점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바다에 대한 환경보호 대책은, 개인의 도덕성을 제외하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든다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정부의 시책, 지자체나 단위 어업협동조합의 활동, 마지막으로 조구회사의 활동이 그것이다.

정부 시책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일단 환경성(우리나라 환경부에 해당)에서는 바다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생물다양성보전전략'이라는 공식사이트도 운영 중으로, 섬나라인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다가 미래라는 의식이 전반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무조건 잡는 어업이 아니라 키워서 수요를 충족시키는 양식업의 권장이 일본의 주요정책이다.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정부 규제로 양식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014년 2월 6일

자 일본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정부, 어협, 양식전문가 등이 회의를 거쳐 양식업자의 채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 주요 양식어종인 방어와 잭방어의 생산량을 10% 줄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식어류의 생산목표를 지시하는 것은 농업의 쌀 생산 조정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양식업자와 소비자들은 정부방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도 어업(양식업 포함)은 아직 농업에 비해 합리화가 낮은 상태이고 양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산업화 면에서는 노르웨이나 칠레에 한참 뒤지고 있다. 기사는 “생산량 조정은 수익성 높은 어업에 역행하고 자유경쟁을 못하는 생산자가 시장을 읽는 경영감각도 잃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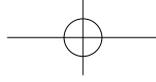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 유스 어협의 환경보호 성공 사례

일본 내에서 눈에 띄는 바다환경 보존은 지자체나 어협의 바다환경 보존 활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동 사례나 지역별 어협의 홈페이지나 각종 보고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에히메(愛媛)현 우와지마시의 유스(遊子)어업협동조합은 '바다를 경작하는 마음



▲유스의 진주조개 양식장 전경.  
▲어협 주도의 환경보호 운동으로 다른 어촌의 귀감이 된 에히메현 유스 항구의 위치 안내도.



**環境・美化 ECO協力商品**

このマークの表示された商品の売り上げの一部を  
釣りの普及、釣り人の安全確保へつなげる  
環境事業等である「つり環境ビジョン」の資金として活用してまいります。  
また、多くの皆様からの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釣り環境向上のため優先的に  
釣りを  
キレイに  
つり環境ビジョン  
ウカケを  
するよう  
釣りを  
いやすよう

3つの事業に取り組みます。

JAFTMA 日本釣用品工業会 | 公益財団法人日本釣振興会

◀ 최근 일본 낚시용품에 대부분 부착되어 있는 '에코상품' 스티커.  
◀ ◀ '에코상품' 판매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각 지역 호수와 항구의 바닥 청소를 했다는 보고 내용.

을 잊지 말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본 내 대표적인 환경보호 어촌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어협이 지역민들과 연대하여 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하고 있고 청년어업자협의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어업정책을 지키며 양식 및 가공품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년어업자협의회와 여성부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각종 표창도 받아 다른 어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원래 이곳 유수 지역은 일본의 시골 중의 시골로서 주요 어업인 멸치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일찍이 지구책을 마련하여 방어, 참돔, 진주조개 양식으로 어업형태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대를 이어 어업에 종사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고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고향 보존하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부터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찌꺼기와 배설물 처리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산화 휘발성 황화물'의 양을 측정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사용하고 버린 솥을 이용하여 해수 정화작용이 있는 철탄단자를 만들어 바다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철탄단자는 바닷물과 반응하여 철이온을 발생시켜 해조류의 성장을 촉진하여 어패류의 서식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작업에는 현지의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돕고 있다고 하니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보호자금 확보 위한 '에코상품' 판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조구회사의 낚시터 환경보호 활동이다. 현재 일본은 최강의 낚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낚시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낚시인구가 피크를 보인 시기는 1998년으

로 2020만 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2년에는 81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 소매매출 시장에도 영향은 현저하여 1997년에 3400억 엔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여 2011년에는 1700억 엔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경기불황도 한 몫을 했겠지만 자원 감소 즉, 물고기가 낚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크다고 본다. 민물낚시 인구는 그나마 잘 낚이는 바다낚시로 이동하였고 바다에서도 자원이 줄어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는 지구책으로 일반사회법인 일본낚시용품공업회(日本釣用品工業會, JAFTMA)와 공익재단법인 일본낚시진흥회(日本釣振興會)는 2012년 5월에 '낚시환경비전'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낚시를 깨끗하게'라는 이름으로 호저 및 해저의 청소, 물고기 보호 및 치어방류, 낚시터 확대 및 방파제 개방운동 등 3대 사업을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자금 확보를 위해 낚시상품에 마치 세금처럼 일정량의 금액을 더하는 것이다. 2013년 4월부터 2~20엔의 금액이 '환경미화ECO협력상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품에 추가되었고 2014년부터는 모든 낚시용품에 더해지게 되었다.

낚시환경을 지키는 것이 매출감소를 막는다는 의식은 예전부터 일본의 조구업체마다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 내 조구업체 중에서 역사가 꽤 긴 야마리아(YAMARIA Corporation)는 200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ECO챌린지 선언'이란 활동을 통해 낚시터 환경보존에 적극적임을 홍보했다. 환경부하 절감을 위하여 제품 포장 사이즈를 25% 축소,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포장재 사용, 납 제품의 코팅, 염화비닐 소재에 대한 가스제를 무해한 성분으로 교체, 워밍 제품의 소재 변경, 무늬오징어 산란장 설치 등 절약, 무해, 재생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 미국 바다

# 쓰레기 투기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구속

### 해상에도 오염 물질 일체 버리지 못해

이재우 뉴욕 오션헌터호 선장

미국은 낚시인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낚시시장과 다양한 장르의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대한 어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과 엄중한 법률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제도와 기관이 항상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곳도 낚시동호회나 낚시협회가 있지만 한국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운동을 벌이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워낙 방대한 땅과 인구를 가지고 있어 오프라인 모임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이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출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단지 컴퓨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 온라인 낚시모임만 대략 6천여 개로 추산된다.

미국은 국토의 1/30이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광대한 내륙에 형성된 호수, 강 등 다양한 낚시여건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총 낚시인구는 대략 4500만 명으로 한국의 인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30% 정도인 1500만 명 정도가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낚시관련 법과 집행은 주마다 달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미국은 한 개 주의 크기가 한국 국토보다 몇 배 큰 나라이다. 그런데도 자연환경 훼손과 쓰레기 투기 및 방치 문제는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강력한 법규가 한몫하고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성숙한 미국 시민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낚시에 관한 행정은 지역경찰, 공원경찰, 환경국, 해양경찰, 해안경비대, 산림국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관리하며 사법기관으로 형사고발과 수사권까지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벌금을 부여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는 배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 외에 대부분의 해안은 낚시가 금지되어 있어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안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낚시를 허용하는 장소도 지저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낚시터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사

자원봉사자들이 백사장에서 바다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람들이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체포되어 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

### 낚시할 수 있는 해안 제한적, 배낚시 발달

미국 해안의 총 길이는 약 153,594km인데 낚시를 허용하고 있는 구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15~30%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LA가 있는 미국 서부의 경우 연안 수심이 깊어 일부지만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동부 해안의 경우 먼 바다까지 수심이 얇은 모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전망이 좋은 해변의 경우 사유지가 많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런 곳은 대부분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미관상 낚시가 금지되어 있다. 설령 낚시가 가능한 백사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낚을 수 있는 어종이 많지 않다. 따라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부두나 방파제에 한정되어 있다. 그곳 역시 안전상 문제로 많은 곳이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안전이 보장된 작은 방파제나 부둣가를 낚시 허용 구간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낙시터를 순찰하고 있는 경찰.



부둣가 바다낙시터 모습.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바비큐 등.

낙시 장소에는 반드시 쓰레기 처리장과 화장실 그리고 생선을 손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낙시인들은 반드시 낙시면허증이나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낙시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항시 관리자와 경찰이 순찰을 하며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투어를 감시하기보다는 범죄 예방과 낙시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밤낙시는 일체 할 수 없으며 일출 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만 낙시를 허용하고 있다.

낙시터의 관리나 감독은 산림국, 환경국, 공원국, 지역경찰까지 포함되어 공조와 협조를 통해 단속이나 계도를 하고 있다. 만약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당할 경우에는 최소 경고에서부터 벌금형 혹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당한다. 벌금형의 경우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순전히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몇 십 달러부터 몇 천 달러까지 교부된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순전히 현장 상황과 적발된 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체포될 경우에는 경찰서와 법원 유치장에서 이를 정도 지낸 다음 재판을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구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고 외에 또 다른 조치도 있다. 공무원이 낚시를 정해 법원에 출두시켜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다. 법

원 출두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하루 종일 소요되며 최종 법정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구속 등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미국은 환경에 대해 강력한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 반드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따르게 되므로 감히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낙시가 허용된 구간에서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되어 있으며 한 곳에 모아진 쓰레기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운반되어 지정된 장소에서 매몰 소각되거나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전문 업체에 넘겨 재생산된다.

### 낙시터엔 쓰레기 처리장과 화장실 설치

미국 동부지역 낙시인들은 대부분 배낙시를 즐긴다. 연안 수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대륙붕에는 어자원이 넘쳐나고 계절 따라 다양한 장르의 낙시가 활성화되어 있다. 배에서도 환경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은 철두철미하다. 배 내부는 물론 항구 내에서도 음식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항시 감시하고 있다. 선장은 낙시인들이 버린 모든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한 다음 항구로 돌아오면 반드시 일정 요금을 지불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되어 있다. 바다에서 오염물질 투기 감독은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200마일 내에서 이뤄지며 미국 선박은 물론 외국 보트에도 적용된다.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의 경우 바다에 투기할 수 있는 물질을 거리별로 나눠 관리 감독을 하며 이런 내용이 적힌 경고문이 배마다 명시되어 있다. 즉 3마일 이내에는 각종 쓰레기나 오수, 생활 폐수, 분뇨, 플라스틱 등 어떠한 것도 투기할 수 없으며, 3~25마일 이내에는 각종 포장재료, 물에 뜨는 성질의 쓰레기,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에 한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 더 먼 바다에서는 해양에 버려 오염이 되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만 투기를 허용하고 있다. 만약 불법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이 역시 벌금형이나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까지 된다.

미국 낙시인들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물속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거나 침전물이 발생하는 밀밥이나 미끼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고, 루어나 생미끼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분해되지 않는 낚시줄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하여 따로 수거한다. 미국은 아직 한국처럼 낚에 대한 사용 제한이나 법적 규제가 없다. 하지만 낙시인들 스스로가 재활용 용품으로 따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다. 🇺🇸



# 미국 내수면 친환경적 낚시터 인프라 구축

낚시터, 어종에 따라 주마다 탄력적 운용

강한승 프로 배서, N·S 필드스텝

필자는 1년간 미국의 알래스카에 체류하면서 계류낚시를 즐겼다. 알래스카에서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 비해 낚시 인프라가 아주 다양하고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강과 호수가 존재하는 알래스카에서는 어디를 가도 낚시표지판과 관리소가 자리 잡고 있다. 알래스카만 해도 아주 많은 낚시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소에 관리인이 항상 상주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표지판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지판에는 낚시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루어낚시만 가능한지 생미끼를 사용해도 되는지, 혹은 크기나 제한된 어구 등이 있는지 표기하고 어떤 어종을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 모두 표기해 두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나 처리법도 안내하고 있으며, 관리소에서는 주변 지리 정보나 포인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어찌 보면 낚시를 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귀찮기도 하지만, 그 규정을 지키면 얼마든지 낚시할 수 있고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낚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다. 또 이러한 관리소 주변으로 캠핑사이트, 쓰레기통, 수도, 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낚시와 레저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정해진 장소에서 야영을 하고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다.

## 강, 호수 전역에 낚시안내 표지판 설치

낚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미국은 그 돈을 세금에서 충당하기도 하지만 막대한 운영비는 낚시라이선스의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라이선스는 하루, 한 주, 한 달, 일 년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간을 설정하여 구입할 수 있는데, 지역마다 가격과 기간, 대상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낚시를 한다면 그 지역에 맞는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

알래스카만 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라이선스가 있다. 우선 주민과 비거주민으로 구분해서 주민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라이선

스를 판매하는데, 거주민이 낚시만 할 경우 일 년에 24달러, 사냥을 포함하면 48달러, 트래핑을 함께 하면 62달러의 가격에 판매한다. 하지만 비거주민의 경우 낚시만 하는데 하루에 20달러, 일주일 55달러를 받으며, 연간으로 구입하면 150~250달러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킨연어나 오리 같은 특정 시즌에만 잡히는 종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외에 따로 스탬프를 구입해야 잡을 수 있는데, 주민은 연간 10달러, 비거주민은 하루에 10달러에 판매한다. 참고로 곰이나 사슴 등은 따로 사냥면허를 받고 태그를 구입해야 하는 등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금액도 늘어난다.

## 저소득층, 현지 주민은 라이선스 비용 감면

필자가 처음 라이선스를 접했을 때는 ‘돈이 없으면 낚시를 하지 말란 거야? 왜 돈을 주고 낚시를 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라이선스도 저소득층에게는 2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이 있으며, 만 16세 미만은 라이선스 없이 낚시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무료로 낚시할 수 있으며 주민이나 비거주민도 라이선스를 연장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낚시를 다니며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겪어 보면 라이선스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에서는 라이선스 검사를 철저히 하는 걸까? 실제로 알래스카에 있을 당시 집 근처 가까운 호수에서 혼자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보안관이 다가와 친근하게 “물고기는 좀 잡았나? 어디 나라 사람이냐?” 등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라이선스를 검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이선스가 없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보통 300달러이며 위반 사항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라이선스 비용은 다시 낚시인들을 위해 사용되는데 지역 호수나 강에 방류할 치어방류 기금으로도 배정되어 사용한다. 



## 독일

# 피싱클럽 중심의 낚시관리 시스템 정착

### 1년에 몇 시간씩 낚시터 청소활동 의무화

안 월렌브루크 독일 Ockert 대표/JS컴퍼니 독일 파트너

독일의 낚시인구는 1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독일에서 낚시를 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독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낚시관리시스템인 피셔라이게제쯔(Fischereigesetz=낚시법)가 있으며 산하 피싱클럽들이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낚시를 하려면 낚시법에 의한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허가증은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있고 기간을 넘길 때마다 갱신해야 한다. 피싱클럽에 소속되면 연회비를 내고 피싱클럽은 소정의 금액을 주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법률상 낚시인들이 피싱클럽에 소속되면 1년에 몇 시간씩 클럽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발생한다. 대부분 낚시인들은 이 시간을 낚시터 청소에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피싱클럽 회원들이 1년에 한두 차례씩 모임을 갖고 저수지와 강변을 청소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규정된 봉사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을 넘긴 이후부터 시간당 일정 금액을 피싱클럽에 지불해야만 한다.

독일 낚시터의 청결도를 평가하자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독일에서는 양어장에서는 거의 낚시를 하지 않고 자연호수나 연못, 강 등에서 주로 낚시하는데 그런 곳들도 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낚시인들이 스스로 쓰레기는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옆의 낚시인이 쓰레기를 버리면 분명하게 지적하고 수거할 것을 권한다. 그럼에도 간혹 병이나 담배꽂초, 비닐봉투 등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 양이 많지 않아 쉽게 수거되며 그대로 낚시터에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

### 주정부뿐 아니라 산하 피싱클럽에도 관리규정 있어

어족자원 보호 부문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낚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잔챙이들은 한 번 바늘에 걸리면 생존확률이 높지 않아 놓아주지 않고 죽인다. 그러나 큰 물고기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식용으로도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놓아준다. 독일인들은 물고기를 다룰 때도 매우 조심해서 다룬다. 애초부터 물 밖으로 꺼내지 않거나 아주 잠시만 꺼내어 바늘을 빼는 게 일상화돼 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고기들은 일반적으로 놓아주지 않고 죽인다.

주정부뿐 아니라 각 산하 피싱클럽에서도 어족자원 관리와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주정부와 피싱클럽 모두 각각의 낚시관리 규정이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 낚시산업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긴 어렵지만 자동차, 제약, 엔지니어링 같은 분야에 비하면 매우 작은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수년 전 독일의 한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낚시도구, 미끼, 허가증, 경비, 보트 대여비, 숙박료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독일 낚시인들이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은 20억 유로(약 2조 4천8백억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중에서 낚시도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



강에서 밸리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독일 낚시인들.



## 호주

# 취사 허용 않고 무단투기 시 고액 벌금

### 낚시터에 모인 쓰레기는 정부에서 수거

임대종 시드니 거주/칸짜 필드마스터, 강원산업 필스테스터

호주는 섬나라이다 보니 민물낚시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댐은 몇 개 없고 내륙에 리버(River)로 불리는 강마저 해수인 경우가 많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 서쪽 내륙을 흐르는 파라마타 리버에는 감성돔 사촌격인 브림이라는 고기와 송어, 복어, 민어 같은 바닷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다. 그래서 호주의 낚시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다낚시를 즐기는 편이며 배낚시, 갯바위 낚시, 바다루어낚시가 주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갯바위에서 만날 수 있는 고기는 다양한데 브림(감성돔 사촌인 헤다이), 블랙피시(빙에돔을 닮은 루더릭), 드러머, 스내퍼(참돔), 킹피시(부시리), 민어와 더불어 상어와 새치까지 모두 낚을 수 있는 어류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드니 동쪽 면은 전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드니를 포함하고 있는 NSW주의 동쪽 해안은 길이가 1600km에 달한다. 이 중 해수욕장을 포함한 일부 보호수면과 안전하지 않은 일부 절벽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곳에서나 낚시할 수 있다. 또 낚시터 입구마다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통, 식수대 등도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

2013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총 인구는 약 2300만 명이며 이 중 시드니가 포함된 NSW주에 1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집에 낚시대가 있을 정도로 낚시가 보편화돼 있고 온 가족이 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호주에서

가장 인기 높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바다낚시 장르는 록피싱으로 불리는 갯바위낚시이다. 갯바위낚시의 형태는 루어낚시, 찌낚시, 원투낚시 등으로 다양하다. 시드니에서 차로 가깝게는 10분, 멀게는 4시간 거리에도 갯바위낚시터가 있는데 그중 시드니 중심부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저비스베이라는 곳에는 갯바위에서 마린(새치)을 낚는 공식 게임장이 있을 정도로 갯바위낚시의 인기가 높다.

### 유치원부터 자연환경보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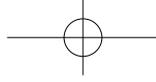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호주는 약 35년 전부터 피싱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의 주체가 각 주정부이다 보니 다른 주로 넘어가 낚시를 할 때는 그 주의 피싱라이선스를 따로 구입하여야 한다. 피싱라이선스는 낚시터, 각종 레저숍, 공항 등 여러 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낚시터 쓰레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비해 호주의 낚시터에서는 좀처럼 낚시 쓰레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본인이 발생시킨 쓰레기는 낚시 후 확실하게 정리하기 때문인데 아마도 유치원 시절부터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다. 밑걸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버려지는 낚시줄이나 봉돌 외에는 갯바위에서 발견되는 낚시 쓰레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또 호주에서는 거의 밤낚시를 하지 않는데 취사 과정이 생기지 않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편이다.

만약 낚시터에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 옆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하면 주정부에서 알아서 수거해가므로 매우 편리하다. 쓰레기통은 각 지역의 카운슬(주민센터)에서 비치, 관리하며 이 모든 예산을 주정부에서 거둔 피싱라이선스 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내 낚시터는 약 7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이 비용의 일부 역시 낚시터 관리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호주에는 한국과 같은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없으며 단순히 리사이클(재생) 쓰레기인지 아니면 그냥 버릴 쓰레기인지만 구분해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낚시정보, 제한 마릿수와 어종 등을 담은 시디. 주정부에서 무료로 낚시점에 배포하고 있다.



낚시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필자 일행이 갯바위 출조 때 준비해가는 도시락.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



필자가 포획 금지 어종과 해산물의 종류, 길이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가리키고 있다.

버리면 된다.

한편 호주에서는 해수욕장이나 백사장에서 취사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음식물은 따로 마련해 놓은 식수대와 원두막, BBQ 시설 등에서만 해먹을 수 있다. 만약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면(호주인들이 그런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곧바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데 간혹 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낚시인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기는 한다.

아직 호주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호주에서는 담배꽂이를 버릴 경우 공초 1개당 한국 돈 25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벌금이 비싸다.

### 강력한 포획 제한 법규, 그러나 탄력적 운영

호주 낚시인들은 어자원 보호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호주 낚시인들은 고기가 많이 낚여도 대부분 방류하며 정 요리해 먹고 싶다면 2마리 정도만 집에 가져가는 게 상식이다. 어종도 다양하고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물고기가 풍부하더라도 어자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혹 아시아에서 이민 온 낚시인들이 불필요하게 고기를 많이 낚아 결국 죽인 채로 버리곤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본 호주인들은 가차 없이 비난을 퍼붓는다.

호주에서 불법은 강력한 벌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몇 달 전 시드니 모닝헤럴드 신문에 동양인 부부가 전복 190여 마리를 잡았다가 단속됐으며 재판을 받아 벌금 4천만원 이상을 내게 됐다는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실린 적도 있다.

국립공원의 레인저(보안관)들은 안전관리뿐 아니라 낚시터 주변의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도 겸하고 있다. 또 가끔씩 낚시인들이 낚시하고 있는 갯바위까지 내려와 포획 금지 어종을 잡지는 않았는지, 어종별 기준치 이하의 고기를 잡지는 않았는지, 제한 마릿수를 넘기지는 않았는지 등도 확인하는데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한국 돈으로 200만~400만원의 높은 벌금을 물게 된다.

필자는 호주 이민 온 지 5년째이지만 아직 호주에서 캐치앤릴리즈란 구호를 본 적 없다. 강력한 법으로 마릿수와 포획 금지 체장 등을 제한하고 낚시인들도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캐치앤릴리즈란 표현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법규의 탄력적인 조절이다. 포획 금지 어종과 싸알을 영원히 못 박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실태를 조사해 새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낚시정보 그리고 제한 마릿수와 어종 등의 종류를 담은 시디를 무료로 낚시점에 배포하고 있다.

한편 호주에서 낚시는 비교적 수준 높은 취미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 귀족 취미로 알려진 골프나 테니스는 호주에서 서민레저로 취급받는다. 반대로 릴이나 낚시대 값이 골프채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낚시용품이 대부분 수입품이기 때문에 추정 부마다 피싱라이선스 시행 유통구조 관계상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게 아닌가 싶다. 🐟